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조건 등을 규정하고 규율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갖추어 놓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해석의 우선순위) 본 특수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규정한 내용이 발주기관의 임상병리 위탁검사 용역 계약 목적과 상이·상충되거나, 그 조문의 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최우선하여 적용되며, 특수조건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검사예정수량) 검사예정수량은 연간의 발주 추정 수량으로 이행 과정에서 이는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의 제기나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대한적십자사 공동구매 항목으로 지정되어 일괄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서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계약단가의 결정)

- ① 계약단가(검사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산출한 개별항목의 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출하고 결정한다. 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상한금액(보험수가) 대비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고 비급여항목은 제외한다.(원 미만 절사)
- ② 계약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산정한 기초금액 산정률과 낙찰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급여 상한금액이 없는 경우 낙찰률이 적용된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서 이를 결정하되, 사후 통상 거래가격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정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이를 환수하고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차년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되는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2월을 초과하여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검사물의 수거)

- ① 발주기관은 검사물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조치를 계약상대방이 수거할 때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감사위탁 당일에 전량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위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수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수거하고 발주기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방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의 감사의뢰에 필요한 재료 및 용기, 서류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검사물에 대하여 직접 내원하여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거일은 주 6일(월요일~토요일)간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달리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은 검사물의 의뢰 및 수거 시 거래장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대금의 청구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통지)

- ①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에게 통지한 계약상대방의 검사일정에 따라 전일까지의 수거분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양식(계약상대방의 양식으로 한다.)에 의해 검사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2일 이내에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때의 발주기관 업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방은 검사결과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 자체 웹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발주기관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의 OCS 및 EMR 전산시스템에 검사의 진행 상황과 검사의 접수 및 결과의 조회 및 출력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맞춰 이를 구축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전송 및 입력업무를 지원하며 이미지 결과는 스캔 등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한다. OCS 및 EMR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 ④ 발주기관의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추가적 업무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발주기관이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각종 학술자료 및 기타 통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도관리 등과 관련하여 학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⑥ 발주기관이 연2회 이상 검사의 정확도 및 정밀도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시 계약상대방은 추가비용 없이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범위)

- ① 발주기관은 의뢰할 검사물을 계약상대방에게 검사항목을 정확히 하여 의뢰하고 검사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위탁의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위탁 검사물 수거시 이를 재차 확인하고 이를 수거한 이후에는 검사물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검사결과 오류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검사물의 오염, 손괴, 검사 결과의 오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도관리에 필요한 검체검사 및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임상병리검사 전문업체로서 검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통지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고지하여 발주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통지·고지 등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제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수탁검사기관의 점검)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탁검사기관을 점검 및 방문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대금의 지급 및 방법)

① 계약상대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검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익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금액의 확인을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해당 **청구월의 익월로부터 6개월 이후 이를 지급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2.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의 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검사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3. 2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항목과 다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항목이 명세서 등과부합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즉시 응하지 아니한 때
5. 검사의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하고 횟수가 연 3회 이상 달할 때
6.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체상금의 합계가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때
7. 검사의 착오 또는 지연, 불량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행할우려가 상당한 때,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과실 없음을 주장할 수 없고, 발주기관 및 환자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유의사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참가 혹은 계약 시 계약품목, 계약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이후에 무지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사항의 위반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를 준용한다.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20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가부터 3-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2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우리청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